조특법 처리 또 연기…광주은행 매각 차질 빚나

〈조세특례제한법〉

우리금융 26일 이사회 철회·연기 여부 결정

국회 27일 처리 방침 백지화 가능성은 낮아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우리금융그룹에서 분리하는 방안의 철회 또는 연기 여부가 다음주 중 결정된다. 광주·경남은행 분할 매각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1단계로, 우리금융이 분할 매각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경우 민영화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은행과 JB금융지주(전북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광주·경남은행 분할 철회·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이날 이사진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금융의 이 같은 결정은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조특법 개정안에는 광주·경남은행 분할과 매각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우리금융이 내야 할 법인세 6500억원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금융은 조속한 민영화를 위한 현재의 매각 방식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경우 두 지방은행의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변경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윗글 파문으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했다"며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기재위 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안 사장의 종북 몰이와 야권 비방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 사장이 작성한 야권 비방 트윗 354건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에 따라 오는 26~27일께 이사회를 소집, 조세소위원회 무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조치란 광주·경남은행 분할의 철회·연기를 의미한다. 우리금융은 다음달 1일을 분할 기일로 잡았으나, 이를 철회하거나 미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광주은행 등 매각 대상 지방은행 노동조합의 반발이 누그러진 데다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분할이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금융계의 시각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고 같은 날 기재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를 거쳐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B 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사는 지난 19일 광주은행 매각작업의 장애물로 꼽혀왔던 '상생협약안'에 합의, 난항을 거듭해 왔던 매각작업에 숨통을 틔웠다. 양측은 ▲독립법인 유지 ▲고용안정 보장 ▲경영자율권 보장 ▲임금 및 복지증진 ▲자본 적정성 유지 ▲인력채용 ▲지역사회 환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분의 지역 환원 ▲지주사 명칭 변경 ▲민영화 절차 협력 등 총 11개 항에 합의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모든 금융상품에 위험등급 표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판매직원 실명제도 시행

앞으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기업어음(CP) 등 증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위험 등급이 표기된다. 또 펀드에만 적용됐던 판매직원 실명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펀드에만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의 위험 등급이 부여되고 있다.

금감원은 운용사·판매회사가 부여하는 위험등급을 모든 금융상품에 표기하고, 투자상품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위험등급에 따라 적색·녹색·황색으로 나누도록 했다. 설명확인서 첫 번째 장에는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도 크고 굵은 글씨로 기재된다. 위험등급뿐만 아니라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증권사들은 CP,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을 판매한 이후 7영업일 이내에 일반투자자들이 판매 직원에게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제작한 광고물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 올해 1분기 안에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금융투자협회 규정,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실사 착수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자 자격으로 지난 19일 광주은행 노사와 상생협약안에 합의한 JB(전북은행)금융지주가 20일부터 광주은행에 대해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했다.

회계·법률 등 외부 자문사 관계자, JB금융 직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광주은행 본점 11층에 마련된 실사단 사무실에서 재무와 자산 등 광주은행 경영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실사에 돌입했다.

JB금융은 앞서 지난 12일 실사를 위해 광주은행 본점을 찾았으나 '상생안 미합의'를 이유로 광주은행 노조가 실사를 저지, 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었다. 실사는 앞으로 5~6주간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은행 매각은 실사 후 매매대금 조정과정을 거쳐 6~7월 잔금지급, 금융위 인가 등을 통해 오는 8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이노비즈센터 기공 20일 광주시 북구 월출동 첨단1단지에서 열린 광주이노비즈센터 기공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광주시 제공〉

1월 광주·전남 어음부도율 소폭 하락

전월비 0.15%P 떨어져

1월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 1월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전자결제분 제외, 금액 기준)은 0.08%로 전월 0.23%에 비해 0.15% 포인트 떨어졌다.

전월에 비해 광주지역은 0.36%에서 0.15%로 0.21% 포인트, 전남지역은 0.11%에서 0.03%로 0.08% 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신규 부도업체수(당좌거래정지 업체수)는 5개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신설법인 수는 442개로 전월 401개보다 41개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익산국토청 교량건설 등 1조4600억 투입

올 업무계획 발표 60% 상반기 집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일 해상교량 건설과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 1조4614억원 규모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익산국토청은 호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 예산 가운데 60%인 876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며 이중 도로사업은 61건(8950억원), 하천사업은 20건(334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도-임자, 염산-백수 등 전남지역 16개를 비롯해 총 23개의 해상교량 건설 및 해안선 일주도로 건설에 3799억원을 투입해 서·남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국토청은 57개의 해상교량(완성 20개, 공사중 23개, 추진 예정 14개)을 호남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 자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 지원 및 도심부 교통혼잡 개선사업 등 간선도로망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심과 읍·면 소재지 교통난 해소와 출·퇴근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승주 우회, 화순-광주 등 7개 사업에 802억원을 투입하고 병목구간 해결을 위한 도로 확장 사업(4개소)과 위험도로 개량(17개소), 교차로 개선(29개소), 사고 잦은 곳(14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철도와 고속도로, 항만, 국도, 지방도 등 호남권 모든 도로망의 효율적 연계를 높이기 위해 영광-대산 등 4개 사업에 341억원을 투입한다.

하천분야는 영산강 봉학천 등 60개소의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1339억원을 투입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고향의 강 사업(15건, 114억원)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레저·문화가 공존하는 친환경적 생태하천 조성사업(24건, 234억원)도 진행한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주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도로·하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호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1930.57 (-12.36)	▼ 525.69 (-4.18)	2.86% (0.00)	▲ 1072.20원 (+6.70)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필리핀어 등 통역원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복)가 필리핀어와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전문통역원을 채용한다.

모집기간은 25일 오후 6시까지로, 광주지역본부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올해 12월5일까지로 시급 2만원, 주14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문의(062-970-1753). /임동률기자 exian@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고소득자 탈세조사 강화

국세청 업무보고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대한 세금 포인트제,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정상 납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고액·장기 체납 근절, 술 유통 과정의 불법 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8조5000억원 부족했던 만큼 올해는 목표 세수인 204조9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치밀하게 세수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